

1년 남은 지방선거 벌써 혼탁

선심성 기부 난무·줄세우기 등
광주·전남 불·탈법 행위 잇따라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 시·도교육감 및 교육위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2010년 지방선거(6월2일)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 벌써부터 탈·불법 사례가 꼬리를 물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지역에서는 연초부터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선심성 기부행위가 난무하고,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줄세우기와 사조직 결성 등 물밑 선거준비로 점차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민주당의 계파갈등 양상 등으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각종 선거 변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마 예상자들은 일찌감치 지지세력 형성을 위한 기초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광주·전남 일부 공직사회에서는 고질적인 '줄세우기'가 벌어지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전문성이나 능력은 뒷전인 체단체장과의 지연, 학연 등을 바탕으로 노론자위 보지 부여로 줄세우기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내년 선거에서 지지를 조건으로 각종 공사 발주에서 편의를 봐주는 방식으로 암묵적인 지지층 형성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도 최근 인사를 지역 내 직능단체장으로 발탁해 잠재적인 지지층을 확보하는가 하면, 새로운 사회단체나 각종 모임 등을 결성하는 등 사전 선거조작을 구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사-

도 교육감과 교육위원도 동시에 선출하도록 돼있어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더욱 혼탁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 행위 적발도 잇따르고 있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김충식 해남군수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선관위는 고교 총동창회장 취임식에 선거구민을 초청, 음식물을 제공한 순천시의회 K모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K모 의원은 지난 3월 자신의 총동창회장 취임식에 동창회원이 아닌 부녀회장, 통장, 이장 등 지역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초청장 654통을 발송해 자신을 홍보하고, 참석한 선거구민 26명에게 5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전남도 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2006년 5·31 지방선거 이후 지금까지 7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 이중 6건을 고발하고 3건은 수사의뢰, 69건은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광주 북구선관위도 광주시의회 J 의원을 자신이 저술한 서적을 무상 배포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전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단체장들의 직무를 빙자한 선심성 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



“밀타작 신나요” 전국 최대 규모의 우리 밀 생산지인 광주시 광산구 주최로 지난달 30~31일 송산 유원지에서 열린 ‘제 3회 광산 우리밀 축제’를 찾은 한 가족이 발로 구르는 탈곡기를 이용해 신나게 밀타작을 하고 있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보조금 부당 지급·불필요한 해외여행 일부 지자체 예산 ‘핑퐁’

광주·전남 집행 실태

광주·전남지역 일부 자치단체들이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하거나 불필요한 공무원여행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등 예산절감 노력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감사원이 발표한 ‘2008 회계년도 예산집행실태’에 따르면 영암군은 지난 2007년 7월과 2008년 2월 두차례에 걸쳐 전남도로부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보조금 2억원을 교부받았으나, 이 보조금을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등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편법으로 특정 단체의 회관신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흥군은 지난해 10월15일부터 11월3일까지 10일간 A면장을 비롯한 17명이 국외여행비 4천800만원을 들여 터기 등 3개국을 방문하는 공무원 여행을 실시했으나, 여행기간 동안

농가방문 등 공식일정은 3일(12시간)에 그쳤으며, 나머지 5일(출발 및 도착일 제외)은 이스타빌, 카이로 등에서 관광하는 등 관광위주의 국외여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화순군은 총 사업비 320억원 규모의 B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금수요 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실시계획이 승인되기 전인 지난 2005년 12월30일 토지매입비용으로 전남도 지역개발기금 19억원을 미리 차입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2007년 1월 중단됐으며, 차입금에 대한 1년3개월 간의 이자 9천600여만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완도군은 ‘노화건강테마촌’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법에 따른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데다 민자유치 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함에도 국비와 도비를 포함, 3차례에 걸쳐 25억원의 보조금을 받아냈으나 결국 사용하지 못하

고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서구와 북구, 광산구청은 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 부적절점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들 구청은 5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성취도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 이들은 성과상여금 계급별 평균액을 산출한 뒤 수령액이 평균액보다 많은 경우 이를 소득세 명목으로 공제한 뒤 상여금을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하는 직원들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은 전문계고의 장학금 지급 업무를 허술하게 했다가 주의 요구를 받았다. 시교육청은 지난 2007~2008년까지 전문계고 학생 1천 153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학생이나 학부모의 계좌에 장학금을 넣어준 뒤 이를 다시 수업료로 내도록 했으나, 19명이 이를 내지 않는 바람에 567만여원의 예산이 결손 처리됐다. /홍행기·윤영기·박진표기자 redplane@

초등 1·2학년 6교시 수업 검토

국민공통 교육과정 1년 축소 추진

현재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으로 돼 있는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9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학생들이 한 학기 또는 학년에 이수하는 과목수를 줄여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교과군을 축소하고 초등학교 수업시수를 확대해 1~2학년도 6교시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교육과정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미래형 교육과정’ 시안을 마련해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시안에 따르면 국민공통 기본 교육

과정은 10년에서 9년으로 1년 단축되는 대신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어난다. 학년으로 따지면 초등 1학년에서부터 중 3학년까지를 국민공통, 고등 3개 학년을 선택 교육과정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시안이 제시한 미래형 교육과정의 적용시기는 고교가 2012년부터, 초·중학교가 2013년부터다.

국민공통 교육과정의 교과군은 현재 10개로 돼 있으나 이를 7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즉 국어, 이과, 사회, 외국어(영어) 등 10개 교과군을 국어, 수학, 사회(도덕), 과학기술, 외국어, 체육, 예술(음악·미술)

등 7개로 줄이는 것이다. 이는 학생이 한 학기에 이수하는 교과목수를 줄여 학습 부담을 줄이고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와함께 초등학교는 연간 최소 수업시수를 확대해 6개 학년의 수업을 모두 6교시 기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4교시 정도까지만 하는 초등 1~2학년도 수업을 6교시까지 늘려야 한다.

고교의 내신평가제를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도 시안에 포함됐다.

시안은 체육, 음악, 미술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상·중·하 3단계로 평가하고 기술·가정은 기술과 가정으로 각각 분리되 실습 중심의 수업이 되도록 ‘합·불’(Pass/Fail) 또는 상·중·하로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천신일 회장 영장 청구

‘차 게이트’ 수사 재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박연차 전 태광산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 달 31일 오전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

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중단됐던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8일 만에 재개된 셈이다.

검찰은 전 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및 중

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구속 여부는 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부장판사의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천 회장을 처음 소환하는 등 세 차례 불러 조사하고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었으나 그날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영결식이 끝날 때까지 모든 수사가 중단됐었다. /연합뉴스

신양파크호텔
Summer Wedding Package
부대비용 27,000원 부터
예약실 ☎228-4711-2
대표전화 ☎228-6000